1년2개월 지난한 협상… 막판 '숨막힌 담판'

■ 극적 타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한국협상 대표들이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7월 본궤도 올라 6차 서울 협상부터 진전

쇠고기·자동차 결전…농산물 마감시한까지 진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미국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에서 협상 출범선언이 이뤄진지 1년2개월 만에 타결됐다.

◇첫 협상이 열리기까지=한미 FTA의 시작을 알린 신호는 지난해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나왔다. 한미 FTA 추진 의지를 밝힌 것.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월3일(한국시간)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협상 초반부터 흘러나왔던 이른바 '4대 선결요건'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미국을 FTA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완화와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강화 및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연기, 스크린쿼터 완화를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양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힘들었던 협상 전반=한미 FTA 첫 협상은 지난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됐으나 탐색전에 불과했다. 이어 7월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협정문·양허안 교환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결과는 파행이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부터 양측은 '협상장'을 이용해 기 싸움을 벌였다.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수도 워싱턴이나 경제중심도시가 아닌 시애틀에서 회의를 개최한데다 협상장으로 박물관을 개조한 건물을 사용했다. 우리 측을 무시하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평가됐다.

그러자 우리측은 4차 협상에서 오렌지를 개방 예외품목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협상장을 제주도로 옮기는 전략을 썼다.

◇6차협상부터 진전=한미 FTA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협상부터다. 특히 이 협상에서 우리측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편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고 의약품 특허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쇠고기, 자동차 최후 결전 = 하지만 이른바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꼽혔던 쇠고기 등 농산물 문제는 막판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미측은 뼈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과 개방 대상에 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양국은 3월26일부터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를 내세워 3월31일 오전 7시를 시한으로 하는 최후 담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쇠고기와 자동차를 필두로 섬유와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간접수용 범위 등을 놓고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로 인해 양측은 당초 시한까지 협상타결에 실패했고 48시간 동안의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는 4월 1일 오후 드디어 마지막 초읽기 협상에 들어갔고 예정했던 협상시한을 또다시 넘겨 밤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김 본부장은 2일 오전 11시35분 그간의 모든 절충 결과를 챙겨들고 청와대로 향했고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와 타결발표가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 관건…2009년에나 공식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국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국회 처리 절차를 밟기 위해 가서명 절차를 밟는다.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TPA에 의해 한국과 FTA를 체결할 의사를 알린다"는 통지문을 접수한다.

이어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5월 중순쯤. 미국이 통상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이어 협정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해 양국이 공개시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역시 국회 한미FTA 특위나 통외통위 등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본서명은 미국 TPA에 의해 최종 시한이 6월29일이 되며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비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더라도 실제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정부가 연말 대선이나 내년 총선전에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따라서 내년 총선 후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민주당의 의회 다수석 차지 이후 FTA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에 앞서 상충하는 법률 개정작업도 완료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양국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협정 체결 이후 비준 동의안 제출까지 기한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사유로 한미FTA의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진경제 발판…국익 위한 선택"

임기후반 최우선 과제 "인내심 갖고 성원해준 국민에 감사"

■노 대통령 결단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된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대통령 공식환영식에 참석, 태극기를 흔드는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였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2일 한미 FTA 타결 직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양국 FTA 협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작년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며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월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를 잘살려 FTA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으며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는 한미 FTA를 "큰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1차 협상 직후인 6월12일 포털사이트 대표와의 오찬에서는 "개방 않고 교류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 까지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다.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 안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FTA 체결이 대세라는 인식 속에서도 '국익 최우선'이라는 대명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내 산업과 국민정서상 민감한 쌀과 쇠고기 등 농업부문 등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그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진보세력들의 급속한 이탈을 가져왔다. 특히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한미 FTA 반대 운동 동참은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노 대통령의 뜻을 꺾진 못했다. 정치권과 진보진영의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노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8월9일 노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또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협상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못 좁히면서 '졸속 타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자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실익 위주로 협상할 것 ▲기간내 타결되면 좋고 기간을 넘겨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질 것 ▲이익이 되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협상단에 내려 국익관철을 전제로 협상 타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상단에 힘을 실어줬고,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막을 내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